

보조금이 저신용 자영업자 사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The Effect of Subsidy on Low Credit Self-Employers
: Seoul SMEs Supporting Fund

조 홍 주**
Jo, Hong-Joo

■ 목 차 ■

-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 III.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IV.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이 저신용 자영업자 사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자연실험적 상황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차보전 보조금 지급 정책 변화에 따라 신용보증 대출을 받은 저신용 자영업자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서 지원된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 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보증과 서울시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은 그룹과 신용보증만 받은 그룹으로 나누고, 보조금 지급이 저신용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과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stata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려 하였다.

* 본 논문은 2017년 서울시 공무원 시정연구논문공모전 공모논문을 발전시킨 연구입니다.

** 논문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문 접수일: 2018. 11. 10, 심사기간: 2018. 11. 10~2018. 12. 20, 게재확정일: 2018. 12. 20.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이, 성별, 신용등급 등의 요인을 통제했을 때 보조금으로 이차보전지원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하여 채무불이행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둘째, 이차보전을 받은 경우에 생존기간은 연체시까지 50일, 채무불이행시까지 38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인 경우와 나이가 많을수록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조금 지원이 저신용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영세 업체의 생존 기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저금리가 기업의 생존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과 상반되는데, 제1금융권의 접근이 어려운 한계상황의 금융소외자영업자의 특수한 상황과 후속 지원이 없는 특례보증의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저신용 자영업자 입장에서 채무추심의 압박과 연체이자가 적은 공공부분의 채무를 연체 및 부도를 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상환에 대한 동기부여의 부족으로 인한 정책적지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 등 정책 집행의 설계 및 집행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주제어: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용보증,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interest subsidy through the examination of concrete data in natural experiment situations. Due to changes in the interest subsidy policy, low credit self-employers who received their loan through a loan guarantee were able to simultaneously distinguish between cases of receiving and not supporting the subsid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efault rate and the survival period were examin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TATA. The analysis found that those who received the interest subsidy had an increased probability of the assurance institution subrogating the bank on behalf of the debtor by 1.1%. The survival period was shortened significantly; it was shortened by 50 days for delay, and 38 days for default. Thus, in the case of low credit self-employers, the subsidy effect increased the default rate and decreased the survival period of the enterprise. This is a result of the banking sector not being accessible, as well as follow-up support for low credit self-employers not being provided. Low-income self-employers often have multiple debts. Because of this, it may be more reasonable to delay and default on public sector deb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a more systematic and delicate approach is needed with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enforcement in order to include subsidy support and loan guarantees.

- Keywords: Policy Funds; Interest Subsidy; Public Credit Quarantee; Small Business Loans; SMEs; Loan Guarantee; Regression Analysis; Seoul Metropolitan Small and Medium Industry Development Fund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경제가 성장하여 금융시장이 발전하면 금융시장에 자금이 풍부해진다. 이에 따라 자금 수요자가 적은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자본 시장이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신용이 낮은 자영업자는 이러한 금융시장의 발전에서 소외되기 쉽다. 금융기관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자영업자는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후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다수의 소액 대출보다 소수의 고액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운영과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은행의 영업에서 후순위에 놓이기 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은행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대출이 거절되는 신용할당(credit allocation)이 나타나게 된다(Stiglitz and Weiss 1981, Jaffee and Russell 1976). 금융시장이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만 운영된다면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이 높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은 경제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금융포용정책의 대상이 된다. 금융포용 대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금융정책은 정부의 직접대출, 정부소유은행을 통한 대출, 보증기관을 이용한 신용보증 제공에 의한 대출, 그리고 이러한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자의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차보전을 제외한 다른 세 종류의 방법은 대출 기관과 손실 부담의 방법이 다를 뿐이고, 자금 차입이 목적인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차이는 거의 없다. 이차보전의 목적은 금융 부담을 약하게 함으로써 지원받은 업체나 개인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자의 직접적인 부담을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줄여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금융소외 특례보증을 받은 업체 중에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아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게 된 자영업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채무불이행이 될 가능성과 생존기간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금융소외자영업자에 대

한 자연실험적인 상황을 통하여 사업체의 생존률과 생존기간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신용보증과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의 정책 목적 중 일부의 달성여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자영업자의 생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OECD 2017년 통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중에 약 26%를 차지하고 있어 OECD 평균인 16%보다 높은 편으로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제 활동인구는 대략 560만명이다. 이들을 급여 소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취급하여 분석한다면 정확한 분석결과를 내기 어렵다. 자영업자는 교육수준이 낮아 취직이 어려워 급여소득자가 되기 어려운 비자발적인 자영업자와 교육수준이 높고 급여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자영업자를 선택하는 고능력의 자발적 자영업자로 이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재호, 2000). 그러므로 자영업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영업자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영업자에는 능력이 있는 자발적 자영업자 보다는 비자발적인 생계형 자영업자가 다수를 차지하며 이들은 산업예비군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박창귀, 2016). 그리고 이러한 비자발적 생계형 자영업자의 안정성은 저숙련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비자발적 자영업자의 특징 중의 하나가 금융시장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본, 자격증이나 직장 경험 등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자발적 자영업자와 다르게 자본 축적이나 금융 거래의 기회가 없이 자영업자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신용거래 기록이 누적되어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별다른 신용 활동이 없을 경우 6, 7등급이 부여되게 되고, 이러한 경우 금리가 저렴한 은행 등 제 1금융권의 신용대출이 어렵다. 따라서 은행에서 거절된 사람들은 제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고, 제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기 어렵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리가 높은 대출을 계속 이용하고 낮은 소득에서 높은 금융비용 지출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상당수의 저신용 자영업자는 이러한 금융 거래의 불이익을 인식하면서도 신속성과 편의성 등의 이유로 사금융의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송지용·이희숙, 2014).

많은 이들은 자영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휴폐업과 매출을 기준으로 한 2017년 통계청

의 기업생멸 통계에 의하면 5년차 창업 자영업자의 생존률은 28.9%에 불과하다. 저신용 자영업자는 이러한 낮은 생존률과 금융소의 상황으로 정책금융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실질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김명록, 2016). 저금리의 자금이 과도하게 제공되거나 신용보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장기적으로 서민금융의 근간이 훼손되어 서민금융의 시장기능이 형성되기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손상호, 2013).

2.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지원

신용보증제도는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증기관 등에서 부실이 발생할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용할당(credit allocation)으로 나타나는 금융 시장에서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여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개발도상국에서는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보증서를 통하여 신용을 보강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용보증제도는 그 형태와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약 80여 국가에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1989년 기술보증기금 외환위기 이후에 소상공인 지원을 주로 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지역신용보증 재단이 설립되면서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

신용보증제도는 신용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인 기업의 신용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신용 지원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의 경우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신용등급자료인 CB(Credit Bureau)등급을 기본으로 이용하게 된다. <표 1>과 같이 각 등급별 특징을 가진 10개의 등급으로 구성된 신용등급을 이용하게 된다. 개인신용등급인 CB등급은 2002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NICE, KIS, KCB 세 회사가 경쟁하다가 현재는 2009년 NICE와 KIS가 통합하여 NICE 평가정보와 KCB사가 각각 정보를 수집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 1>에는 NICE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 등급별 구성 비율과 불량률이 나와 있다. 이러한 고객의 부실여부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실적도 영향을 받게 된다. <표 1>과 같이 이러한 신용등급에 따라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신용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 대출의 경우에는 1~3등급의 경우에는 제 1금융권 4~6등급의 경우에는 제 2금융권 그 이하의 경우에는 대부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개인신용등급별 주요특성

구분	특징	인원(명)	구성비	누적구성비	불량률	거래
1	최상위 신용등급으로 은행 주거래고객 신용도 매우 우량, 건전한 신용활동 유지	11,471,196	25.25	25.25	0.05	은행
2	상위신용등급으로 은행 주거래고객 장기간 우량한 신용거래 이력 보유	7,940,455	17.48	42.74	0.17	은행
3	은행, 카드 주거래고객으로 안정적으로 신용거래 유지중이며 꾸준한 우량거래 후 상위등급 진입가능	3,376,218	7.43	50.17	0.31	은행
4	신용도는 우량한 상태, 단기연체가 없는 신용활동	6,643,768	14.62	64.80	0.51	은행
5	신용거래기간이 짧거나 활발하지 않음 장기연체는 없으며 연체이력 다소보유	6,718,378	14.79	79.59	0.65	은행 2금융권
6	신용등급이 보통이며, 장기연체가 없는 신용활동, 약간의 신용위험존재	5,174,011	11.39	90.99	1.93	은행 2금융권
7	2금융권 주거래고객 단기연체가 있거나 장기연체 경험보유	1,251,389	2.75	93.74	6.46	2금융권
8	2금융권 주거래고객 신용도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부실화진행 단기연체가 있거나 장기연체 경험보유	1,236,060	2.72	96.46	9.95	대부업
9	현재 장기연체 보유 신용도가 낮은 상태로 부실화요인 현재화 위험업권 거래 및 조회있음	1,227,773	2.70	99.17	11.93	대부업
10	신용도가 매우 낮은 상태로 부실화, 신용거래 문제 발생	376,330	0.82	100	34.79	대부업
계		45,415,578	100		1.58	

주) 상기 자료는 nice신용평가정보의 2018년 3월 자료(구성비)와 2017년 3월 자료(불량률)를 기초로 하였음

3. 선행연구

이번 연구의 선행 연구는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과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같은 보증과 보조금 등의 정책 도구에 대한 연구이다.

1) 정책도구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에서 보조금의 수혜의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과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자 하는 산업이 그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도 이러한 부분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고 연구 또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보조금에 대한 연구와 필요성에 대하여도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문명재(2008)의 연구는 정책 도구에 대하여는 이론적 논의를 김준기 외(2008)는 정책도구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정책도구에 따라 그 효과성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의 대상인 지원의 대상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거나 정부의 관심 사업분야에 한정되어 있었다.

2) 정책자금에 대한 연구

정책자금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으로 정의된다(곽수근 외, 2004). 은행이나 보증기관을 통한 대출은 시장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정책자금과 예산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부중심적 성격이 강하다(김현욱, 2005). 자금지원의 당위성은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의미를 지니거나 정책의 목적에서 찾고자 하였다(김준기 외, 2008).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부족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김동환, 2009). 이와 함께 정책 자금의 지원 효과에 대한 미시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원 방법의 차이는 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정부에게 중요할 뿐 아니라 관련 연구에서도 중요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지원 방법에 따라서 선택편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 편의 문제는 정책 자금 지원 효과 연구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한계로 기존 연구의 경우 선택 편의 극복하고 학술적으로 보다 의미있는 인과 관계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우선 연구 대상 선정에 있어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채광기 외(2011), 유영중·황성수(2009), 정형권(2009), 이영범(2006)의 연구에서는 정책자금이 집행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권세훈(2012), 김찬수(2009), 강종구·정형권(2006), 곽수근 외(2004), 김현욱(2005), 배경화(2005)의 연구는 비교를 위하여 정책 자금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함께 연구하였다. 김현욱(2005)은 이러한 연구의 경우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열악한 상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정기적인 공시와 외부감사 의무화된 대기업에 비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비교대상인 기업이 외부 감사 대상기업인 경우 비교적 규모도 크고 금융 능력이 큰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 선정을 통한 노력과 함께 통계적인 노력이 시도되었다. 김현욱(2005), 조규산외(2004), 박용주 외(2010)의 연구는 고정효과 등을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였고, 박정

수·최태현(2016), 김찬수(2009)은 매칭방식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의 경우 지원 자격, 지원기관의 선정, 신청자의 자기선택 등 선택편의를 극복하지는 못하여 정책 자금의 지원 효과에 대하여는 연구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상의 기존의 연구에서 배경화(2005), 강종구·정형권(2006), 송혁준 외(2006), 이석원 외(2008), 채광기 외(2011) 백준성·윤병섭(2013)는 정책 자금의 지원이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곽수근 외(2004), 김현욱(2005)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고 보았으며 권세훈(2012), 김찬수(2009), 강종구·정형권(2006)는 지원기간이나 지원 대상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봐서 정책자금에 대한 연구는 방법과 대상에 따라서 결론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3) 신용보증에 대한 연구

신용보증제도의 명확한 효과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 중소기업청의 대출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Craig, Jackson et al. 2005). 또한 신용보증에 대하여는 재원의 고갈 위험이 큰 비효율적인 정책 도구라는 견해와 중소기업의 신용보강이 가능한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정책도구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Zecchini and Ventura, 2007). 우리나라에서는 임혜진 외(2011)의 연구에서는 신용보증과 경제성장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신상훈·박정희(2010)의 연구는 신용보증이 오히려 수익성과 성장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Kang(2007)의 연구는 수익성, 매출액, 부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의 연구로 공공 영역의 도움에 의한 새로운 자금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견해와 자생적인 능력을 키우기 보다는 공적 영역에 의존성을 키워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보증서 담보 대출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자체가 어려워 대출 자체가 정책금융의 중요한 혜택이었으나 금융시장의 변화로 이차보전 방식으로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식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이기영, 2008). 하지만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지원에 대한 만족도 자체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저금리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박춘엽 외, 2001). 따라서 보증 기관에서는 경쟁을 유도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강맹수·권의종·이근희, 2012).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정책효과분석은 기본적으로 실험연구가 아닌 이상 선택편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정책 자금의 경우 지원을 신청하는 회사나 개인의 자기 선택과 기관선택이라는 두 번의 선택편의가 이루어지게 된다(이석원 외 2008). 기관선택의 경우에도 지원기관과 집행기관에 의한 심

사가 분리하여 진행될 수 있고 기관선택이 이루어지는 곳이 금융기관, 보증기관, 행정기관이 나에 따라서 선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선정기관과 집행기관의 차이로 한 차례 더 선택 편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보증비율의 차이는 채무불이행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Saito and Tsuruta 2018). 보증기관이 손실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와 은행에서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선택편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자금에 대한 연구는 지원대상의 특성과 자금의 성격과 지원기관과 집행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지원 대상에 선택편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연구의 대상도 대부분 규모가 일정 수준이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현욱(2005)은 기존연구에서 표본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노용환(2010)은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이 이미 재무적 특성이나 영업 성과 면에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로 결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정책자금의 경우 특정 정책의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성과 측정 역시 부정확한 경우가 많으며, 효과성 평가의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존 김천수(2009), 이석원 외(2008), 김현욱(2004) 연구의 경우 이익률을 중심으로 한 수익성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이같은 지표는 연구의 대상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정 대상의 특징이나 지원 상품의 특징에 의하여 좌우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용된 채무불이행과 생존기간의 경우 채무 면탈의 극단적인 목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이 있는 고의적인 채무불이행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작이나 왜곡이 어려운 지표라고 볼 수 있어 기존 연구에서 많이 쓰인 재무제표보다 정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연구의 경우에는 정책자금 보조금 보증 상품 등에 대한 명확한 구분없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책자금이나 보증 상품의 경우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특정 시기에 특정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연구 결과의 해석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단일 상품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본 연구가 다른 연구에 비해 가지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저신용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중소기업정책 자금을 비하여 역사가 매우 짧은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자료의 한계와 무관심으로 저신용 자영업자에 대한 계량적인 선행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이유는 자영업자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이 지방자치의 시작과 외환위기와 맞물려 있으며 기존의 정책자금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특성상 정확한 재무 자료 수집 등 신용평가가 어려운 것도 다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책

도구의 측면에서 용자지원보다 이차보전의 확대되는 추세에 대하여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Ⅲ.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1)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금융정책을 시도하기 보다는 기존 금융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확대하는 방법을 취했다(김명록, 2016).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기간 중 서울신용보증재단 운영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경험을 활용하여,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대응하였다.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통하여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무점포 및 무등록 사업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은 기존의 보증상품에 비하여 지원 대상의 조건 및 지원의 절차를 대폭 완화하였다. 자영업자 중에서 신용도가 낮거나 금융기관에서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자영업자로 기존에는 보증이 불가능하였던 사업 확인이 가능한 노점상 등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와 자동차판매원, 보험설계사, 화장품 외판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등 개인용역사업자에게 보증이 가능토록 하였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거절이 발생하지 않고 대출금융기관의 손실이 없도록 보증기관에서 원금과 정상이자를 모두 부담하는 100% 보증을 하고 있으며 기존 보증상품과 다르게 신용등급에 따른 제한이 없다.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100%보증서가 담보된 대출로 담보대출로 분류되지만 수혜자 입장에서는 보증심사과정의 추가되고, 이에 따른 보증료 부담이 추가 될 뿐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대출과 유사하다.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은 2009년과 2010년 두 해 동안 전국적으로 약 16만 건 대출금액으로 1조 6천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 서울에서만 총 4만 4천 18건에 3922억 원의 보증서가 발행되어 대출 금리 5~8%로 대출이 실행되었다. 이 상품은 신용등급 최하인 10등급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에게만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특혜금융 상품을 지양하고 신용

이 좋은 사람이 저신용자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현상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지만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100% 보증 상품에 비하여 금리가 2~4%정도 높게 책정되었다.

2)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서울시는 1965년 11월 6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여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박중권, 2003). 서울시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용자지원은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의 접근성을 높여 경제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나누어진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설자금과 경영안정자금에 해당하는 성장기반자금, 기술형창업기금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등으로 나누어진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운전자금이나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1~2%의 금리를 지원하는 이차 차이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이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운영되며 표 3과 같이 매년 1조원 정도의 금액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표 2〉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신청기업수	지원기업수	신청액	지원액
1999	1,210	1,048	298,500	220,606
2000	1,048	983	313,782	260,254
2001	2,985	2,782	482,870	437,493
2002	2,206	1,785	534,289	373,053
2003	7,815	7,569	746,231	519,715
2004	7,699	7,367	823,202	655,299
2009	90,138	78,406	2,292,135	2,021,873
2010	42,847	39,073	1,798,034	1,640,452
2011	33,788	29,429	1,499,679	1,296,407
2012	35,740	29,681	1,343,509	1,113,485
2013	43,900	39,176	1,385,444	1,230,333
2014	41,260	37,519	1,212,202	1,074,081
2015	47,687	42,309	1,403,888	1,215,360
2016	35,447	32,395	1,139,217	993,436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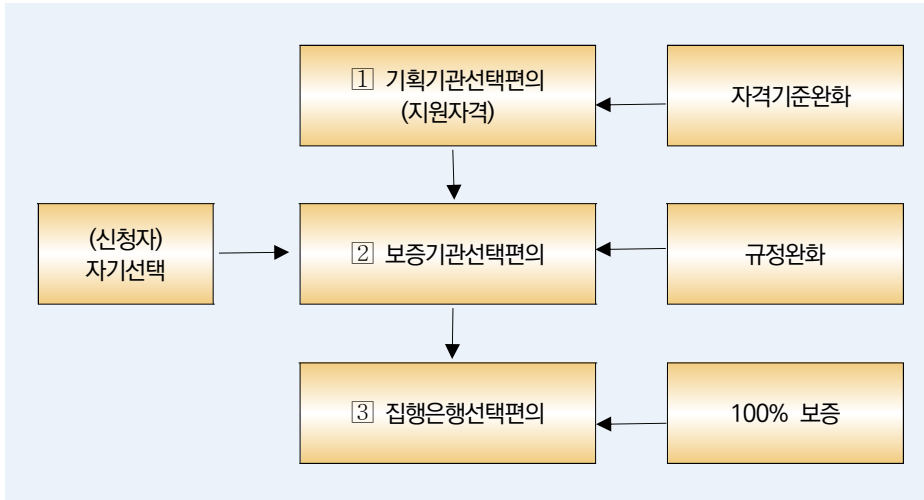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여러 기관에서 각각 별도의 심사가 진행되어서 중복적인 서류 제출과 긴 심사기간을 요구하였다. 2003년 이전에는 서울산업진흥원(SBA)에서 자금 지원에 대한 추천서를 받고 다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서류를 두 번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겼고, 자금 지원은 받았으나 보증이 거절되어 실제로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각각의 기관이 분리하여 심사가 진행한 2003년 이전에는 자금 지원이 결정되었지만 보증기관이나 은행의 거절로 실제 집행률이 67%에 불과하였다(박중권, 2003). 하지만 2003년부터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집행을 담당하여 신용 보증 심사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여부를 심사하게 되었다. 신용보증서의 발급과 자금지원 심사가 일원화되면서 보증서 발급과 자금 실행이 동시에 됨으로써 자금의 실행율이 100%에 육박하게 되었다.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내부 규정 개정으로 특례보증이 운영되던 중간인 2010년 3월 26일 이후에 보증부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동시에 지원되었다.

2. 연구설계 및 분석모형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진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 보증 전체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 자료는 자기선택과 기관선택의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자연실험적 상황에서 만들어져서 간단한 방법으로 연구 분석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20개월의 짧은 기간의 중간에 보조금이 지급되어, 기존 연구에서 문제가 되었던 선택편의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었다. 100% 보증부 대출로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보증 비율이나 은행의 심사에 의한 편익이 발생하지 않아 대출 집행기관인 은행에 의한 선택편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 특례보증 신청에 의한 정책자금은 참여자의 참여 의사 결정과 집행기관의 선정 의사 결정에 따른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 연구 대상인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은 금융포용적인 성격으로 신용관리대상 즉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지원이 가능하여 기관 선택에 의한 선정효과의 오류가 거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청자가 직접 지원하는 자기선택에 의한 선정 오류의 경우에도 지원자가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여부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상당부분 극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선택편의를 최소화한 자연실험적 상황



1) 샘플추출

정책도구인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21일 기준으로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실행건 44018건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 보증은 2009년 1월 23일부터 2010년 8월23일까지 20개월 동안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 중 2010년 3월 26일 이후에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동시에 지원되었다. 다른 조건에는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2010년 3월 25일이라는 특정 시점부터 자금 지원의 여부만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자연 실험적인 상황이 조성되었다. 또한 보증 이후 업체의 연체 및 채무불이행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는데 자료 추출 기준일인 2017년 5월 21일은 마지막 보증이 실행된 경우인 2010년 8월 23일 기준으로도 약 7년 가까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생존기간과 채무불이행의 정도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종속 변수

생존을 측정하기 위한 종속 변수는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보증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대위변제 여부와, 대출시점부터 대위변제시까지의 기간, 대출시점부터 최초로 원금 혹은 이자를 연체한 시점까지의 생존기간을 각각 종속 변수로 하였다. 은행에서는 보증기관

에 이자 혹은 원금의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그 상태가 유지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인으로써 대신 변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원금이나 이자의 연체 사실이 발생한 경우인 사고시까지와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를 하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인 대위변제일 까지를 생존기간으로 측정을 하였다. 모든 대위변제는 사고 발생일을 겪기 때문에 연체한 표본이 채무불이행한 표본보다 많게 된다. 그리고 업체가 채무불이행이 되면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회사에 통보가 되어 신용관리정보에 채무불이행이 등재된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 등의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표 3〉 변수 설명

영역	내용	지표	산출방법
종속변수	채무불이행(default)	대위변제여부 여,부(1,0)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여부
	채무불이행까지의 생존기간(survival)	대위변제시 생존기간(일)	대위변제일-보증실행일
	최초 사고 발생시까지의 생존기간(survival1)	이자 또는 원금 연체 발생시 이자 원금 연체시까지 생존 기간(일)	최초 사고일-보증실행일
독립변수	보조금지급(fund)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여부(1,0)	이자보전여부
통제변수	대출기한	연(1~5)	최초계약시
	신용점수(CB)	1~1000	
	은행(bank)	농협, 새마을금고, 신한(1,2,3)	대출실행은행
	자택 소유여부(self-own)	여, 부 (1,0)	자가여부
	성별(sex)	남, 여(0,1)	
	업종분류(ind)	1~19(2 제외)	
	다른채무(debt1)	여, 부(1,0)	
	보증액(loan)	원	
	대출연도(year)	2009, 2010	
	나이(age)	실행당시나이	출생년-실행년

3) 통제 변수

측정하고자 하는 대위변제율이나 생존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신용위험 측정에서 영향이 큰 재산 소유와 소득과 연관이 큰 변수 중에서 수집이 가능한 정보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자기 소유 주택의 보유 여부는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가 될 수 있고 신용점수는 신

용카드 등의 이용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 정보와 연관이 있다. 다른 채무의 존재는 다른 금융기관의 심사를 통과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채무가 과다할 경우 부정적일 수도 있다. 신청자의 업종에 따른 차이가능성과 대출 은행에 따른 주 이용 고객의 성향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통제 변수에 넣었다. 대출 연도의 차이에 따른 경기 변동을 고려하였고, 보증 조건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통제 변수에 넣었다.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 흔히 언급되는 성별, 연령 등의 인구 통계적 변수를 통제 변수에 넣었다. 자세한 정보는 <표 3>에서 볼 수 있다.

4)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 모형을 만들어 아래와 같은 식을 추정할 수 있다.

- (1) 채무불이행 정도 = $\beta_0 + \beta_1 x + \beta_2 D_f + \epsilon_i$
- (2) 생존기간(채무불이행까지) = $\beta_0 + \beta_1 x + \beta_2 D_f + \epsilon_i$
- (3) 생존기간1(원금 또는 이자 연체시까지) = $\beta_0 + \beta_1 x + \beta_2 D_f + \epsilon_i$

D_f :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여부 (1=지원, 0=비지원)

x : 대출기간, 신용점수, 자택소유여부, 성별, 업종분류, 다른채무 유무, 대출연도, 나이를 통제 대상으로 하였다.

ϵ_i : 오차항

본 연구는 최소자승추정법(OLS)으로 식(1)에 따라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채무불이행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식(2),(3)에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 채무불이행과 연체시까지의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

기존 이차보전 보증부 대출은 그림1과 같이 정책 기획 기관의 기준, 대출 신청자의 자기 선택, 금융기관의 추천, 보증기관의 심사, 2차보전기관의 심사, 대출집행 기관의 심사등 여러 차례의 선택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의 경우는 대량으로 보조금을 통보없이 지원하여 이러한 선택 편의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이차 보전의 지원 여부만 차이가 나타나는 자연 실험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

IV.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기술통계

〈표4〉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내용이다. 두 집단이 다른 채무의 존재를 의미하는 (debt1) 이외에는 동질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른 채무의 존재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그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염두하고 OLS로 분석해 보아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채무의 포함하지 않고 분석한 경우에도 통계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다.

〈표 4〉 집단 비교

영역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미지원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대출기한	4.66	0.711	4.66	0.472
신용등급(CB)	6.01	1.82	6.05	1.61
자택 소유여부(self-own)	0.34	0.47	0.36	0.48
나이(age)	42.23	10.31	42.63	10.28
성별(sex)	0.4	0.49	0.43	0.49
업종분류(ind)	10	3.46	9.89	3.66
다른채무(debt1)	0.38	0.48	0.099	0.299
보증액(loan)	821만원	409만원	1140만원	487만원

〈표5〉은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받은 사람들의 신용등급별 인원으로 전체의 67.4%가 6~8등급에 집중되어 있다.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을 대상인 저신용 자영업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표 5〉 신용등급에 따른 금융소외특례보증건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합계
숫자	918	1526	2015	3237	5002	12786	10177	6297	1733	304	43995
구성비	2	3.5	4.6	7.4	11.4	29.0	23.1	14.3	3.9	0.6	100

〈표6〉은 모집단의 업종 분류를 나타낸 표이다.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와 도매 및 소매 종사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는 보험이나 대출을 알선하는 중개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매 및 소매 종사자에는 가판에서 장사를 하는 무등록 상인이 포함되어 있다. 보험 중개인과 무등록 사업자는 기존의 보증서 담보 대출에서는 보증서 발급이 제한되었으나,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에서 예외적으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였다.

〈표 6〉 업종분류에 따른 금융소외특례보증건수

산업	빈도	구성비율(백분율)
A. 농업, 임업및어업(1)	35	0.08
C. 제조업(3)	1538	3.49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4)	3	0.01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5)	9	0.02
F. 건설업(6)	795	1.81
G. 도매 및 소매업(7)	12,009	27.28
H. 운수업(8)	1,431	3.25
I. 숙박 및 음식점업(9)	4,880	11.09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0)	460	1.05
K. 금융 및 보험업(11)	16,700	37.94
L. 부동산업 및 임대업(12)	683	1.55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3)	586	1.33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4)	331	0.7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5)	8	0.02
P. 교육 서비스업(16)	1,143	2.6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7)	61	0.14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8)	773	1.76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9)	2,573	5.85
합계	44,018	100

업종분류에서 B(광업)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없다.

〈표7〉은 주요 통제 변수의 관측치, 범위, 중간값, 및 평균값을 나타낸 표이다. 〈표7〉을 해석하면 주된 신청자는 보증신청 당시에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신용등급 6등급의 40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다.

〈표7〉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의 기초통계

구 분	신용점수	보증금액	대출기간	대위변제금액(원)	종업원수	나이
관측치(건)	43,992	44,018	44,018	10,762	44,013	44,018
범 위	1~1000	1백만원~20백만원	1~5	16,887 ~20,743,396	0~31	21~87
중간값	712	10백만원	5	5,164.969	0	41
평균값	711	8.9백만원	4.58	6,306.529	0.34	42.3

2. 채무불이행 분석결과

〈표8〉는 채무불이행을 분석한 결과이다. (상세자료는 별첨 참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채무불이행률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게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채무불이행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나이가 많고, 다른 채무가 적을수록 채무불이행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이 채무불이행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표8〉 채무불이행 분석결과

	채무불이행	
	회귀계수	표준오차
보조금	0.012**	0.005
기 간	-0.004*	0.002
신용점수	-0.000***	0.000
성별	-0.036***	0.003
나이	-0.002***	0.000
은행	-0.007**	0.003
자가소유	-0.020***	0.003
보증액	-0.000***	0.000
다른채무	0.712***	0.004
상수항	0.787***	0.060
표본수	40679	

***p<0.01, **p<0.05, *p<0.1

3. 생존기간 분석결과

〈표9〉생존기간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이다. 연체한 업체들의 경우에는 보증이후 연체까지

평균 808일 정상거래를 유지하다가 연체를 하였고 채무불이행한 업체의 경우에는 대출이후 930일 만에 보증기관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으로 대신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9〉 생존기간의 기초통계

구 분	생존기간(채무불이행기준)	생존기간1(연체기준)
관측치(건)	16792	22886
범 위	65~2842	0~2859
중간값(일)	930	672
평균값(일)	997.48	808
표준편차	530.6887	527.255

〈표10〉은 생존기간을 분석한 결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의 경우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38일 생존기간이 단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업체에 비하여 3.86% 생존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시점을 기준으로 808일간 정상 거래를 유지하다가 연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체 이전 정상거래 기간이 50일 단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업체에 비하여 6.18% 정상거래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생존기간 분석 결과

	생존기간(채무불이행기준)		생존기간(연체기준)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보조금	-38.572**	17.794	-50.027***	12.911
기 간	-17.105***	6.624	-25.733***	5.604
신용점수	0.706***	0.045	0.965***	0.038
성별	63.088***	10.002	48.949***	8.106
나이	4.168***	0.478	4.747***	0.388
은행	7.481	9.494	34.403***	7.969
자가소유	66.595***	10.032	39.022***	8.065
보증액	0.000***	0.000	0.000***	0.000
다른채무	-71.461***	11.709	-18.149**	7.879
상수항	806.576***	166.268	219.504	149.028
표본수	13584		19566	

***p<0.01, **p<0.05, *p<0.1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저신용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과 사업체의 생존기간에 이차보전보조금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을 받은 업체중에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아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한 자영업자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위변제의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생존기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금융소외 자영업자특례보증의 수혜자가 사업체의 생존 기간이 줄어들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의 해석으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 위기상황에서의 시혜적 정책의 성향에 의해 나타난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다. 정책 시혜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보증의 보험적 성격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이 2008년 경제 위기에 의한 특례보증으로 이후에 이와 비슷한 유형의 상품 출시가 없는 일회성 지원으로 저신용자가 적극적으로 상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지는 못하였고 이러한 영향이 이차보전 보조금이 좀 더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셋째 저신용 자영업자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하여 두 집단간 역선택에 의한 미세한 차이와 비록 20개월의 시기적 차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보조금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결과가 자영업자에게 일반화가 가능한 것인지 저신용자에게만 해당하는 일반적인 현상인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에서는 채무불이행과 연체율을 낮추지는 못하여 저신용 자영업자를 기존 금융 질서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금융상품 및 보증 상품을 설계하는데 좀 더 섬세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맹수·권의중·이근희. (2012). 보증이 연계된 중소기업 온라인 역경매 대출이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금융연구」, 26(2): 33-58.
- 강중구·정현권. (2006).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과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250호 한국은행.
- 곽수근·송혁준·엄철현. (2004). 정책자금지원을 받은 코스닥 중소기업의 특성요인 및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경영논집」, 38(1).
- 권세훈. (2012). 기술신용보증 기업의 특성과 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산업경제연구」, 25(3): 2069-2087.
- 김경훈. (2017). 새로운 신용정보 공유체계 모델로서의 한국 사례 분석. 「금융정보연구」, 6(1): 39-59.
- 김동환. (2009). 중소기업금융의 이해 한국금융연구원
- 김성제. (2007). 소득유형별 지역불균형 수준의 비교 분석. 「공간과사회」, 27: 81-110.
- 김수영·박병현. (2011). 마이크로크레딧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 SROI 기법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1): 277-304.
- 김수환·강형규. (2017).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20(1): 69-87.
- 김명록. (2016). 한국마이크로 파이낸스의 현황과 과제: 신용공급과 재무지속성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연구」, 32(1): 213-242.
- 김준기·이민호·신기철. (2009). 중소기업 정책자금 직접대출의 리스크 분석 및 기업 생산성. 「생산성논집」, 23(3):173-203.
- 김지영·박상원. (2008).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용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 전환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김찬수. (2009). 중소기업정책금융의 현황 및 성과 감사원 감사연구원.
- 김현욱. (2005).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27(2):47-87.
- 금재호·조준모. (2000). 한국노동패널 특집/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특별호」, 23: 81-107.
- 노용환. (2010).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미시적 성과 분석과 역할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32(1): 153-175.
- 문명재. (2008). 정책도구연구의 학문적 좌표와 이론적 연계성. 「정부학연구」, 14(4):321-347.
- 박정민. (2009). 소기업의 기업특성, 정책자금 지원과정 및 성과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54:1-20.
- 박정수·최태현. (2016). 반복적 정책지원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발표논문집.
- 박중권. (2003). 자치경영 : 지방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절차 효율화 방안(하) -서울시 자금용자 및

- 신용보증 One-Stop 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 52(602): 106-112.
- 박창귀. (2016). 우리나라 자영업의 과도기적 특성 연구. 「경제연구」, 34(1): 163-191.
- 박춘엽 외. (2001). 중소기업인 지원자금 이용자의 만족도 연구 「중소기업연구」, 23(2): 211-235
- 배경화. (2005). 정책금융이 중소·벤처 창업기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금융안정연구」, 6(2):116-159
- 손상호. (2016). 서민금융시장활성화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송지용·이희숙. (2014). 전통시장 자영업자의 재무관리와 사금융 이용, 「한국FP학회지」, 7(4):21-42.
- 신상훈·박정희. (2010). 신용보증지원이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패널분석. 「중소기업연구」, 32(1): 43-64.
- 신용보증기금. (1998). 신용보증제도 운영성과와 발전방향. KCGF RESEARCH.
- _____. (2009). 2008년도 신용보증 성과 및 국민경제기여도 분석. KODIT REPORT.
- 유관희·김영·허광복. (2005).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의 재무적 성과. 「중소기업연구」, 27(4):205-223.
- 유영중·황성수. (2009).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성과분석. 「산업교육연구」, 23(1):219-238.
- 윤상용. (2013).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정책자금 성과분석. 「영상저널」, 5(2):39-60.
- 이석원·김준기·이영범·장경호·이민호. (2008). 정책효과분석과 선택편의 중소기업정책 자금지원 사업에 대한 순차적 선택모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1):197-227.
- 이기영. (2008). 재정용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68-316.
- 송혁준·김이배·오용락. (2006).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경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 28(4):65-80.
- 이영범. (2006).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혜 기업의 상대적 효율성과 생산성 추이 분석. 「행정논총」, 44(4):199-229.
- 이형기. (2011). 투자대상으로서의 마이크로파이낸스 (Microfinance). 「산업경제연구」, 23(2): 1029-1051.
- 임원희. (2006). “마이크로크레딧 (Microcredit) 제도에 대한 개관과 한국의 도입 현황 및 정책제언”. 「사회복지정책」, 25(단일호): 309-331.
- 임혜진·권의중·유승훈. (2011). 신용보증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가 「중소기업연구」, 33(1): 5-15.
- 장우현·양용현·우석진. (2013).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KDI 08, 1-2.
- 전영환. (2007). 정책도구의 다양성 정책도구분류의 쟁점과 평가. 「정부학연구」, 13(4):259-295.
- 정찬우. (2010). 금융 포커스: 핫살론과 서민금융체계의 개선. 「주간금융브리프」, 19(30):12-13.
- _____. (2011). 금주의 논단: 서민금융정책의 개선방향. 「주간금융브리프」, 20(3):3-7.
- 정형권. (2009).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15(2):45-92.

- 채광기·윤병섭·하규수. (201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벤처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6(3):85-107.
- 채희율. (2012). 신용보증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과 신용보증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 30(2):41-65.
- Craig, B., W. E. Jackson, et al. (2005). SBA-loanguarantees and local economic growth,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 Greenwood, J. and B. Jovanovic. (1989). Financial development, growth,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ss.,USA,1989.
- Jaffee, D. M. and T. Russell. (1976). Imperfect information, uncertainty, and credit ration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0(4):651-666.
- Lee, C. S. (2005). Income inequality, democracy, and public sector siz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70(1):158.
- OECD. (2015). OECD Employmrnt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 Saito, K. and D. Tsuruta. (2018). Information asymmetry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redit guarantee schemes: evidence from Japan. Applied Economics50(22):2469-2485.
- Stiglitz, J. E. and A. Weiss. (1981).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71(3):393-410.
- UNDP. (2004). Microfinance and microcredit : how can 100\$ change an economy?
- Kang,dongsoo. (2007). Empirical evaluations on the government financial assistances toward SMEs in Korea KDI international Conference.

〈참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영향

구 분	채무불이행		생존기간(채무불이행까지)		생존기간(연체시까지)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보조금	0.012**	0.005	-38.572**	17.794	-50.027***	12.911
기 간	-0.004*	0.002	-17.105***	6.624	-25.733***	5.604
신용점수	-0.000***	0.000	0.706***	0.045	0.965***	0.038
성별	-0.036***	0.003	63.088***	10.002	48.949***	8.106
나이	-0.002***	0.000	4.168***	0.478	4.747***	0.388
은행	-0.007**	0.003	7.481	9.494	34.403***	7.969
자가소유	-0.020***	0.003	66.595***	10.032	39.022***	8.065
보증액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다른채무	0.712***	0.004	-71.461***	11.709	-18.149**	7.879
업종						
C 제조업	-0.178***	0.058	-252.168	160.841	-106.112	144.493
D 전기	-0.312	0.323				
E 환경	-0.111	0.126	-929.561**	405.133	-404.397	254.747
F 건설	-0.145**	0.058	-278.803*	162.029	-146.332	145.414
G 도소매	-0.160***	0.057	-349.839**	159.263	-168.884	143.361
H 운수	-0.209***	0.058	-286.186*	161.433	-123.994	144.864
I 숙박 음식	-0.155***	0.057	-341.380**	159.599	-174.076	143.604
J 출판	-0.192***	0.059	-363.556**	164.744	-142.564	147.115
K 금융	-0.206***	0.057	-269.046*	159.342	-123.217	143.403
L 부동산업	-0.173***	0.058	-247.671	163.672	-135.491	146.376
M 과학기술	-0.169***	0.059	-271.787*	163.280	-158.718	146.457
N 사업시설관리	-0.208***	0.060	-396.840**	168.263	-224.401	149.693
O 공공행정	-0.055	0.126	-251.813	254.905	-228.914	242.007
P 교육서비스업	-0.195***	0.058	-349.303**	161.628	-161.786	145.037
Q 보건	-0.234***	0.072	-416.410*	224.762	-68.971	187.873
R 예술스포츠	-0.131**	0.058	-331.465**	162.150	-184.524	145.651
S 수리서비스업	-0.176***	0.057	-280.697*	160.208	-125.183	144.068
상수항	0.787***	0.060	806.576***	166.268	219.504	149.028

***p<0.01, **p<0.05, p<0.1

표본수: 44,018